

# 가계대출 위험... 엉뚱한 제2금융권에 불똥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예·적금 비과세 단계적 폐지

### 서민들 돈 빌리기 어렵고 이자부담 가중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을 조립·세마을금고)의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에 나서자 상호금융권이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지역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일원화되면서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담보대출까지 규제될 경우 상호금융권의 성장여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7월 평균 3639억원이었지만 규제가 완화된 8월엔 증가액이 801억원, 9월엔 74억원까지 급감했으며 지난 10월엔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LTV 일원화로 이미 상호금융권에서 시중은행으로 많이 넘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일반 대출까지 규제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호금융권의 시스템이 시중은행보다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억제하면서, 신용대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후우와 평가

능력이 요구되는 관계형 금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방향이 가계대출의 질 개선이 아닌 상호금융권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을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중상회 관계자도 “대출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 농업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사

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 안전망을 축소한다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자가 연 30%가 넘는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비과세 혜택 단계적 폐지와 함께 9월 말 현재 2.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차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LTV·DTI 규제 합리화(업권별 차등 해소) 기조를 계속 유지한 채 내년 1분기 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상·도지정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6.59 (-28.97)

▶ 금리 2.13%(-0.05)

▶ 코스닥 537.21 (-4.75)

▶ 환율 1100.90원 (-1.30)



김한 광주은행장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 '사랑나눔 후원행사'를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광은리더스클럽 '사랑나눔 후원행사'

광주은행은 연말을 맞아 광은리더스클럽과 함께 '사랑나눔 후원행사'를 가졌다.

김한 광주은행장과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그리고 각 지회장들은 11일 동구 소재동의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남구 봉선동의 '형제사'를 방문, 외롭게 겨울을 나는 아이들에게 성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미아보호 및 양양 등을 담당하는 영아복지시설로 영아 6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형제사'는 아동복지시설로 84명의 아

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은리더스클럽과 함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술선수범하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세월호 피해 가족을 비롯해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전남농협, 벼 직파 재배 내년 200ha까지 확대

범씨를 논에 뿌려 벼를 재배하는 '직파농법'이 내년에 전남지역에서 크게 확대된다. 전남농협지역본부에 올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이 참여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음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영암 모정 들녘에서 직파 시연회를 시작으로 5~6월 파종과 추수기를 거쳐 10월 중순께 수확을 완료했다.

영암 군서와 나주 동강 등 관내 7개 농협 52개 농가 72ha의 논에서 직파농법을 통해 재배했다.

육묘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파재배 방식에 따라 올해 생산비를 20~25% 절감했으며 수확량이나 쌀의 품질은 기존 이앙법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도 전남 도내 평균 생산량인 10a당 478kg이지만 이번 직파 재배 시범사업의 평균생산량은 10a당 505kg으로 정곡 생산량을 웃돌았다.

농협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규모화해 재배면적을 200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군 지역 농협의 신청을 받아 직파 재배에 관심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직파재배에 참여했던 농가들도 이곳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중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산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직파재배가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

1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야외광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신세계 임·직원으로 구성된 '희망산타 원정대'의 발대식을 갖고 연탄·난방유 배달,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나눔활동을 전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베트남 열대 과일·수산물 공세 거세진다

### FTA 타결 ... 관세 단계적 철폐따라 재배 농·어민 타격

지난 10일 타결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물은 양허(관세 철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열대과일과 수산물, 냉동 마늘 등 일부 양념류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재배농가와 어민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전남이 주산지인 싼베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지미·넙치·방어 등은 3년 뒤, 냉동 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뒤, 기타 냉동 어

류·계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를 각각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천연꿀도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양봉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건조·냉동 마늘, 건조한 생강 등 일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마늘·생강은 파쇄하거나 건조 또는 냉동한 민감성이 낮은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신선마늘과 신선생강 등은 이번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대거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개인소득자 절반, 1년에 1천만원도 못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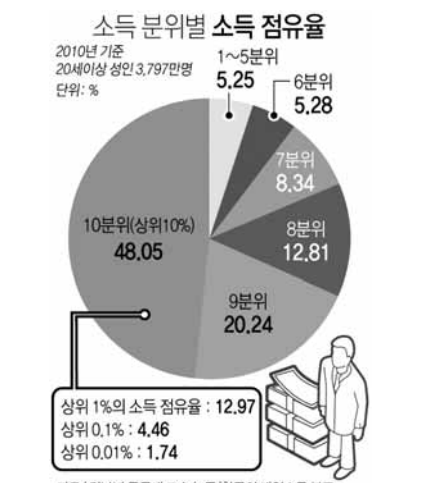
###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

### 김낙년 동국대 교수 논문

근로나 사업, 재산을 통해 돈을 버는 개인소득자 중 48%는 1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서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3122만명 중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8.4%(1509만5402명)였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3분의 2에 이르는 987만 9083명은 소득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만원 미만도 330만2921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1000만~4000만원 소득자



는 37.4%, 4000만~1억원 소득자는 12.4%,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8%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자 전체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었다. 그러나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1074만원으로 평균 소득의 52.5%에 불과해 소득의 상위 쏠림 현상이 관측됐다. /연합뉴스

# “경매”

## 경매 서둘러 마라! 좋은물건은 쏠아진다!

### 탐정처럼 분석하고 목사처럼 협상하고 검사처럼 다뤄라!!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특수물건만 취급
- ▶ 1대1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천경매**  
H.010-3605-5000